

# 민주 선거 개혁안 '2월 국회 의결'

### 여 "농성 먼저 풀어야" 야 3당 "거대양당 합의 먼저" 한국 "연동형 비례 부정적" 입장...고차방정식 풀어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선거제 개혁안 의결 시한 등 입장을 밝힌 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농성 중단을 촉구해 관련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도입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

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이 밝힌 내용은 그간 민주당이 고수해온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배분방식 도입' 주장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난 8일 예산안 통과 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이미 찬성의 뜻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개혁안 도출 시기와 최종 의결 시기를 못박은 것이 기존 입장보다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종료 후 "연동형에 동의하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기존 입장과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도 여러 경로를 통해 농성 중인 야 3당 측과 협의했는데 '시간 끌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어서 2월 말까지로 시한을 정해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입장 발표와 함께 야 3당은 농성을 해제하고 정개특위 논의의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압박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우리 당이 연동형도 점향적인 입장을 얘기했기에 이제 정개특위에서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한다"며 "날도 추운데 여러 대표님이 단식을 오래 하시는 건 대표님들 건강에도 좋지 않고 실제 대화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일단 단식을 중단해주시고 대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야 3당이 민주당의 이날 밝힌 입장을

수용해 농성을 중단하면 선거제 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야 3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입장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야 3당이 일단 농성을 중단한 뒤 '여야 4당' 공동 전선을 구축해 한국당을 설득하고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풀어가자는 입장인 반면, 야 3당은 민주당이 먼저 한국당을 설득해 합의를 이뤄와야 농성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야 3당과 민주당이 간극을 좁히더라도 한국당 설득이라는 큰 산도 남아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공감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다"라고 했다. /연합뉴스

## 정치 브리핑

### "국민 열명 중 세명 이상 섬 거주 의향"

#### 박지원 의원 국회도서발전연구회 조사결과 발표

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지역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국회도서발전연구회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열명 중 세명 이상(33.3%)은 '섬 또는 섬 주변 도시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45.1%) 및 남성(39.2%)의 거주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도서발전연구회는 최근 섬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섬 하면 떠오르는 섬'으로 제주도(59.8%)를 압도적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독도(9.9%), 강화도(7.2%), 울릉도(5.1%), 진도(4.1%)를 꼽았다.

'섬 또는 섬 주변 여행 경험이 있는



섬'은 질문에는 응답자의 46.6%가 있다고 답했고, 없다는 응답은 53.4%에 달했다. 섬 주변 여행 경험은 여성(42.9%)보다는 남성(50.2%), 그리고 30대(53.2%), 40대(50.2%), 그리고 우리나라 섬의 65% 이상이 있는 호남(65.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지원 국회도서발전연구회 공동대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섬 발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성범죄 군인도 전자발찌·보호관찰 선고"

#### 주승용 국회부의장 관련법 대표발의

주승용 국회 부의장(여수)은 12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에게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인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개정해 군인에게도 보호관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군부대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관찰 등의 집행할 필요성이 적고, 보호관찰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군인, 군무원, 사관후보생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법원에서는 군인 등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을 선고할 수 없다.

주 부의장은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사회복귀시 이를 관리 감독할 기준이 없어 성범죄 예방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 군인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 및 재발 방지 등 사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한국당 5·18 진상조사위 출범 협조해야"

#### 최경환 의원, 진상조사위원 조속한 추천 촉구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 의원은 1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하루속히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민중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되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천해서 올해 안에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가 권력이 자국민을 잔인하게 학살한 천인공노할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무엇이 두려워서



여야 합의로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놓고도 3개월 동안 입법을 단교 조사위원회 출범을 지연시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못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못하는 상황에서 10월 1일 대정부질문에서 제안한 것처럼 이미 추천된 6인이라도 임명해 일단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개문발차 해놓고 자유한국당 추천인이 참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예산안 잘해봅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오전 7시 30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세번째)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사직공원, 문화공간 재탄생

### LED 대형조형물 등 음악의 거리 이미지 극대화

광주 사직공원이 음악과 빛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직공원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공공디자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문화공간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음악·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물도 이에 맞춰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공원 입구에는 LED 조명을 활용한 입체

조형물이 들어선다. '사직' 글자가 새겨진 조형물이 빛을 받아 다채로운 효과를 주게 된다.

공원 벤치에는 소리에 반응하는 LED 조명을 설치해 색다른 효과를 연출한다. 지정 시간마다 다른 색상의 빛이 나오고, 벤치에 앉아 블루투스를 통해 음악도 들을 수 있게 설계됐다.

/황애란 기자

## 전남 급식 지역농산물 사용 '명문화'

### 우승희 도의원, 조례개정...농가소득 확대 기대

전남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우승희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도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도 최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전남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전남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1993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협정 체결 당시 학교 급식이 활성화되지 않아 급식재료에 자국산 우선 적용을 받지 못하고, 법률과 조례에 '지역' 농산물 대신 '우



수' 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이후 협정 개정을 통해 정부 조달 급식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16년 1월 발효됐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들은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법령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전남도 또한 지침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 위원장은 "학교 급식에 지역의 신선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를 농도 전남에서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며 "전남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안정적인 수급으로 농가소득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 광주 교통사고 분야 지역 안전지수

### 내년에 대폭 개선된다

광주 교통사고 분야 지역 안전지수가 내년에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 현재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9명)보다 38명 줄었다.

사망자 감소율이 34.9%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를 반영하는 내년 교통사고 분야에서 지역 안전지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교통사고 분야에서 2017년 4등급에서 지난해 5등급으로 내려앉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역 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자

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 안전분야를 지역별로 측정해 1~5등급으로 나눈다.

광주시는 내년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연계해 자살, 교통, 산업재해 분야에서 2022년까지 사망자 수 절반 감축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연 시민안전실장은 "민선 7기 광주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역 안전지수 향상 대책을 공약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2019년에는 지역 안전지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익수하는 남북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후 상호 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북측 현장점검반이 우리측 점검반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통취재단